경위 실무종합

온라인 동영상	(02) 6331-1009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imcodi.com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안동 김재규공무원·경찰학원	(054) 823-911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9~10p)

-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 ②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 ③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④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 해설** ▶
-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 하였다.
 - ② 17세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으나,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였다.
 - ③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핵심정리]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시 대	경찰개념
고대국가	① 경찰의 어원 -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②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를 의미(정치 제외×)
15·16C 중세국가	① 14세기말의 프랑스에서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 → 15세기말에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 ②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교회행정 포함×) → 경찰권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
17C 경찰국가	①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 ② 국왕의 권력유지를 위한 경찰역할이 강조 →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 경찰통제 ③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

18 · 19C 법치국가	18C 독일 계몽철학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를 제외한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1794년 독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제10조).
	1795년 프랑스 죄외형벌법전	① 경찰은 공공의 질서·자유·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제16조). →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 ②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제18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최초 구별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전, 일본 행정경찰규칙의 모범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 베르크 판결	경찰작용의 목적을 위험방지에 한정한 판례(경찰작용의 목적확대×) →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됨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7조). → 경찰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됨
	1931년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
20C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건축·보건경찰)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 → 보안경찰 임무에 국한	

정답 ③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1p〉

-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찰활동으로 그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 ④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해설 →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①③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① 실정법상·조직법상 개념 ②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 →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유동적 개념 ③ 사법경찰, 경찰의 서비스 활동 등	① 학문상(실무상×) 정립된 개념 ②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③ 행정경찰, 예방경찰, 자치경찰 등
양자의 관계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②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불심검문은 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실정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하다.	

정답 ②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8~31p〉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동법 제8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제5호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3항 제6호).

[핵심정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	원칙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③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④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					
	예외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별표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음식물</th> <th>3만원(동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조사비</td> <td> ①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화훼농가 배려) ②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축의금·조의금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조의금 6만원 + 조화 4만원 = 10만원 범위 내이지만 위법)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선물</td> <td> ① 5만원. 다만,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가공품(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 ② 선물과 농수(축)산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물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선물 6만원 + 농수(축)산물 4만원 = 10만원 범위 내이지만 위법) </td> </tr> </tbody> </table>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음식물	3만원(동일)	경조사비	①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화훼농가 배려) ②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축의금·조의금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조의금 6만원 + 조화 4만원 = 10만원 범위 내이지만 위법)	선물
음식물	3만원(동일)						
경조사비	①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화훼농가 배려) ②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축의금·조의금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조의금 6만원 + 조화 4만원 = 10만원 범위 내이지만 위법)						
선물	① 5만원. 다만,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가공품(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 ② 선물과 농수(축)산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합산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물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선물 6만원 + 농수(축)산물 4만원 = 10만원 범위 내이지만 위법)						

정답 ④

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33p>

- ①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사를 둠) 내부 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 ③ 광무개혁에 따라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다.
- ④ 을사조약에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

해설 ▶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을사조약에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

정답 ④

5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40p>

- 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 ④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해설 ▶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위임명령,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핵심정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구분	법규명령	행정규칙
근거	① 위임명령 : 개별적·구체적 위임 필요 ② 집행명령 :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함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함 (예 훈령·고시·예규 등)
형식	조문의 형식으로 발함	조문 또는 구두의 형식으로 발함
법규성 유무	법규성 있음	법규성 없음
구속력 유무	대외적·대내적 구속력 가짐	대내적 구속력 가짐
공포 요부	공포를 요함	공포를 요하지 않음
위반의 효과	위법행위로서 무효·취소사유	적법 유효
기타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적용	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정답 ③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41p〉

-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②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③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을 들 수 있다.
-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해설 → 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분		훈령	직무명령
차 이 점	개념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 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2인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서로 모순된 직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위 상관의 명령에 복종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①

7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47~48p〉

- ①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 ②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 해설** → ①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③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나,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권한의 위임

의의	경찰관청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근거	법정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
한계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효과	① 수임하급관청은 위임된 권한을 자기명의와 책임하에 행하고 쟁송(爭訟)시 피고도 수임기관이 됨 ②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비용부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자 부담이 원칙

정답 ④

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51p>

- ① 수사경과 발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②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이 경우 사 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 해설** → ①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 발령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사경과 발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인 것으로 본다(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제1항).
 ②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2항 제5호)

- ③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 ④ 동규칙 제14조 제2항

정답 ④

9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59p>

-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④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해설**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제72조 제6호).
- ② 동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2조 제2호
 - ③ 동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제72조 제7호
 - ④ 동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제72조 제5호

[핵심정리] 의원휴직

의원휴직 사유	<p>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단, ④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함(단,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함) ②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③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함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함 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⑥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⑦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

정답 ①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10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74p>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11조
 ② 동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③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은 될 수 있으나,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4조 제6항

정답 ③

11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가운데,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핵심정리 교재 61p>

- ①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④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해설** → 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③④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②는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③은 동법 동항 제3호, ④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각각 해당

[핵심정리] 직권면직

직권 면직 사유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⑤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⑥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③ · ④ · ⑤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정답 ①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85p)

-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 ③ 동법 제16조 제1항
- ④ 동법 제20조 제1항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핵심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처분시×)의 법률에 따름(제3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제6조)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제7조)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제9조)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제10조 제1항)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함(제10조 제2항)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봄(제12조)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제15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제16조)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제17조) ②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음(제17조의2)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19조)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제20조)

정답 ②

13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80p〉

-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 ②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하여질 수 없다.

- 해설** → ①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허가는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허가는 보통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다(통행금지 등의 해제).

[핵심정리] 허가

개 념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만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종 류	대인적 허가	이전이 불가능함(예 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사면허, 총포류 소지허가 등)
	대물적 허가	이전이 가능함(예 건축허가, 자동차 검사 등)
	혼합적 허가	이전이 제한됨(예 총포류 제조·판매허가 등)
요 건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행해질 수 있음(예 통행금지의 해제)	
효 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위반의 효과	허가는 적법요건이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	

정답 ②

14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90p)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을(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을(를) 하는 것

① ㉠ 경고	㉡ 제지	㉢ 억류하거나 피난
② ㉠ 경고	㉡ 억류하거나 피난	㉢ 직접조치
③ ㉠ 직접조치	㉡ 제지	㉢ 억류하거나 피난
④ ㉠ 직접조치	㉡ 억류하거나 피난	㉢ 경고

해설 ② ㉠ 경고 ㉡ 억류하거나 피난 ㉢ 직접조치 순서가 적절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정답 ②

1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92p〉

-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 ②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 ③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경찰공무원은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해설** →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수단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위해 방지 목적으로 음식점 등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4항

[핵심정리]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의 의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또는 중대한 손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범죄 또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위해 또는 손해의 발생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법적 성질	경찰상 즉시강제수단(대가택적 강제수단)		
	긴급출입	예방출입	긴급검색
출입장소 (대상)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	공개된 장소	공개된 장소
출입가능시간	주야 불문	영업·공개시간 내	주야 불문
관리자등 동의요부	불요	필요	불요
요 건	① 위험사태의 발생 ②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③ 위해방지나 피해자 구조상 부득이한 것(보충성의 원리) ※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이 용될 수 없음	①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공개된 장소) ② 공개시간 내 ③ 범죄의 예방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	① 경찰관이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 ② 작전지역 안에 공개된 장소
출입시 유의사항	① 출입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② 정당한 관계인의 업무방해 금지 → 관계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의 출입요구를 거절 가능		

정답 ③

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94p〉

- ①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② 동규정 제18조
- ③ 동규정 제18조의2 제1항
- ④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8조의2 제3항·제4항).

[핵심정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안전교육· 안전검사 (제17조·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②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신규 도입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②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사용기록의 보관 등 (제20조)	<p>위해성 경찰장비(무기, 분사기·최루탄등,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p>

정답 ④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17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03p〉

- ①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 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원리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로,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로,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④ 조정의 원리 - 조직편성의 각각의 원리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장단점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는 원리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 ③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는 조정의 원리의 내용이다.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조직편성의 원리

분업의 원리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 → 한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 ② 대규모의 조직일수록 치밀한 분업체계가 형성 → 분업은 주로 수평적인 분업을 의미 ③ 분업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짐
계층제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 → 수직적인 상하명령 복종관계를 특징으로 함 ②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 → 계층제의 필요성 ③ 명령과 지시를 일산분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며,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음 ④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많은 관리비용을 발생시키고 계층간 갈등이 증가하게 되며,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지식·기술 등 도입이 곤란함
통솔범위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 한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격, 부서의 역사,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음 ② 계층의 수, 업무의 단순성, 시간적·공간적 요인, 부하의 능력, 감독자의 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통솔범위를 재검토함으로써 직급조정과 인력재배치 작업으로 연결되는 것임 →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 있음 ③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짐(전문적 사무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음) ※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와 관련 없음

명령통일의 원리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 →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함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지킨다면 실제 업무수행에 더 큰 지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조정의 원리	①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 ② 조정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 → 구성원의 행동통일

정답 ③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105p)

- ① 계급제는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직위분류제에 비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④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 해설** → ①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을 분류하는 제도는 직위분류제이다.
 ②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③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②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시행 ③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①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인사배치	신축적	비용통적
충원방식	폐쇄형	개방형

장점	① 널리 일반적으로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종합적·신속적인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음 ② 기관간에 횡적인 협조가 용이함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 ③ 행정의 전문화가 용이함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함
단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고, 신분보장의 미흡함
양자의 관계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	

정답 ④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17p〉

- ① I 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I 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 ② 동규정 제24조 제1항
- ③ 동규정 제25조 제2항
- ④ 동규장 제27조

[핵심정리] 비밀의 보호

비밀관리 기록부 작성·비치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단, I 급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함)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I 급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①의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음 ③ ②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보관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해서는 아니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음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I 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음. 다만, I 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됨
보안심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둠
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됨.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답 ①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123p〉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
-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

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제1항).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정답 ①

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160p>

-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체포·감금은 제외한다.
-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강력범죄”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9호).
- ②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 ④ 동법 제6조 제1항

정답 ④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21p>

- ①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② 동법 제5조
 - ③ 동법 제8조의3 제1항
 - ④ 동법 제2조 제2호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정답 ①

23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39p〉

- ①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 ② 마짜(Matza)와 싸이크스(Sykes)는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③ 허쉬(Hirs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 ①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인간의 자유의지(의사비결정론)에 의한 것으로 보며, 범죄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실증주의 범죄학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사회과정원인이론

사회학습 이론	Sutherland(차별적 접촉이론) - 범죄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범죄에 접촉, 참가, 동조하면서 학습됨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서덜랜드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함
	Glaser(차별적 동일시이론) -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함	
	Burgess & Akers(차별적 강화이론) -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짐	

<p>사회학습 이론</p>	<p>Matza & Sykes(중화기술이론) -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킴</p>	<p>중화기술에는 책임회피, 피해자부정, 피해발생 부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 5가지로 설명함. 예컨대, '내가 반지를 훔치는 것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반지를 훔쳐도 주인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하는 경우</p>
<p>사회통제 이론</p>	<p>Reckless(견제이론) -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p>	<p>1) 범죄유발의 외적압력 - 가난, 비행하위문화, 퇴폐환경, 차별적 기회구조 등 2) 범죄유발의 내적압력 - 좌절, 욕구, 분노, 열등감 등</p>
	<p>Briar & Piliavin(동조성전념이론) -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범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 자신의 이미지, 사회에서의 지위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려하는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지고 있음</p>	<p>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부모와 선생님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얻어지게 됨</p>
	<p>Hirshi(사회유대이론)-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임</p>	<p>사회적 결속 요소 : 애착, 참여, 전념, 신념 등</p>
<p>낙인이론</p>	<p>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임</p>	<p>Tannenbaum - 악의 극화라고 표현함 Lemert -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여 설명함</p>

정답 ①

24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15p〉

- ① 혈액지문은 실리콘러버법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 ② 제상문은 지문 모양이 말발굽 모양을 형성하는 지문을 말한다.
- ③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는 지문은 변태문이다.
- ④ 정상지문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하다.

해설 → ① 혈액지문은 사진촬영, 전사법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종류와 채취방법

종류		의의		채취방법
현 장 지 문	현재 지문	의의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지지문: 사진촬영, 전사법, 실리콘러버법 • 혈액지문: 사진촬영, 전사법
		정상 지문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이므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	
	역지문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고량과 이량이 반대로 현출됨		
	잠재 지문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可視)상태로 되는 지문		고체법, 액체법, 기체법 등
준현장 지문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관계자 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유류지문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		

정답 ①

25 「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80p>

-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설** ▶ ① 범죄수사규칙 제32조 제1항
 ②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동규칙 제32조 제3항).
 ③ 동규칙 제3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7조 제3항

정답 ②

26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176p〉

-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 및 요지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진정내사 사건은 공람종결할 수 있다.
- ④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 ①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 ②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8조 제1항,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12조의2 제1항).
- ③ 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 ④ 동규칙 제5조

[관련법규]

범죄수사규칙

제18조(사건기록의 관리)① 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 2. 긴급체포를 한 때
-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경찰 내사 처리 규칙

제12조의2(관계서류 등 제출) ①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사종결한 사건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건기록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 2. 긴급체포를 한 때
-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정답 ②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224p>

-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
- ③ 13세 미만인 사람을 요건으로 하므로 13세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3항).
- ④ 동법 제21조 제3항

[핵심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의 특례	<p>① 다음 범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 성폭법 제6조 제2항(장애인유사강간), 제7조 제2항(13세미만자유사강간),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 아청법 제9조(강간등상해·치상), 제10조(강간등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살인), 성폭법 제9조 제1항(강간등살인), 아청법 제10조 제1항(강간등살인), 균형법 제92조의8(강간등살인) <p>② (13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함</p> <p>③ 성폭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됨</p>
----------	--

정답 ④

28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40p>

- ① 행사안전경비의 근거법령으로는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시행령」 등이 있다.
- ②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법」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 ④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해설** ▶ ①④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

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공연법 제11조 제1항).

- ③ 공연법 제43조 제1항

정답 ②

29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268p〉

-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한다.
- ③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④ 청원경찰의 ‘근무 중 제복 착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해설** →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 ②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용한다(동법 제5조 제1항).
 - ③ 동법 제5조의2 제2항
 -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정답 ③

3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60p〉

-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설** → ① 경찰비상업무규칙 제2조 제7호
- ② 동규칙 제2조 제2호
 - ③ 동규칙 제2조 제5호
 -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9호).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핵심정리] 경찰비상업무규칙

비상상황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함		
지휘선상 위치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		
정착근무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함		
필수요원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경찰관 등)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함		
일반요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함		
가용경력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함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함		
비상근무 발령	경찰청장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근무요령		가용경력 동원	지휘관과 참모의 근무형태
	갑호 비상	100%	정착 근무
	을호 비상	50%	정위치 근무
	병호 비상	30%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경계 강화	×	지휘선상 위치 근무
	작전준비태세	×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정답 ④

31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345p〉

- ① '견문'이란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한다.
- ② '정보상황보고'란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 ③ '정보판단(대책)서'란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고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 미리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기능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 ④ '정책정보보고서'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이며, '예방적 상황정보'라고 볼 수 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해설 ▶ ②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는 **중요상황보고서**이다.

①③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정보보고서의 종류

견문보고서	전문이란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통하여 보고(見) 들은(聞)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보고자료를 말함.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견문을 수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생산한 보고서를 '견문수집보고서'라 함
정보상황보고서	① 정보상황보고는 현용정보의 일종으로 '상황속보' 또는 '속보'로 불리며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관련 첩보, 기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심지어는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까지도 경찰 내부에 전파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외부에도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② 속보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상황 그 자체를 보고할 수도 있고 진행과정을 순차적(제1보, 제2보의 형식)으로 보고하기도 함 ③ 속보의 생명은 신속성이기 때문에 보고 형식을 가리지 않지만, 6원칙에 맞춰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중요상황보고서	일반적으로 '중보'라고 불리며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
정보판단(대책)서	① 관련 견문과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 ② 관내 주민들이 인근에 건설예정 중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회를 계속중이라는 첩보에 따라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경장이 관련 동향 및 경력대비가 요망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정책보고서	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로 국민 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민심정보'도 정책정보에 포함됨 ② 경찰의 정책정보는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관련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예방적 상황정보'라고도 불리며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③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경장이 현행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정답 ②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정리 교재 353p)

-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 ③ 동법 제7조 제1항
-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정답 ③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365p)

- ① 해산명령 이전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때,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요청할 필요는 없고,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보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

- 해설** ▶ ① 대법원 2000.11.24. 2000도2172
- ② 대법원 2011.10.13. 2009도13846
-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이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이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7.25. 2010도14545).
- ④ 대법원 2013.7.25. 2010도14545

정답 ③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정리 교재 398p〉

-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및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제1호).
 ③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 등의 3대 원칙을 선언한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28. 99도4027).
 ④ 동법 제9조 제8항

정답 ①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399p〉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4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④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답 ③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36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322p>

- 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 ②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10.9.9. 2010도6579
 ② 대법원 2015.10.15. 2015도12451
 ③ 대법원 2007.4.12. 2006도4322
 ④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범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23. 2010도11272).

정답 ④

37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297p>

- ① 외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 ④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 해설** ▶ 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② 동법 제91조 제2항
 ③ 동법 제96조 제2항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호).

정답 ④

38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420p>

-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해설** ▶ ①②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③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제호).
 ④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정답 ③

39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427p>

- ① 주한미군지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중국인 피의자 체포 · 구속 시, 피의자에게 영사관원 접견권 등 권리를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국인 피의자 체포 · 구속 시,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러시아인이 체포 · 구속된 경우 지체없이 러시아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 ③ 중국인 피의자 체포 · 구속 시,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② 설명이다.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imcodi.com 에서 제공됩니다.

[핵심정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약」에 따른 피의자 권리 통지 내용

-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4일 이내에 해당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
- ② 영사관원의 요청 시 수사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영사관원 간 접견 주선
- ③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영사관원 간 문서 수·발신의 권리 보장
-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은 한국에서 러시아인이 체포·구속된 경우 지체 없이 러시아의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답 ③

40 「경찰 감찰 규칙」에 의한 감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핵심정리 교재 454p>

- ①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 진정·탄원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0조
- ② 동규칙 제17조 제1항
- ③ 동규칙 제13조 제1항
- ④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동규칙 제16조 제2항).

정답 ④